

일본 투자환경조사단 공정위 방문

국내의 장기자금 용자와 투자 가능성을 직접 확인·조사하기 위해 토노무라 히토시(外村 仁) 노무라자산관리 투신사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의 금융계와 연구소 등의 경제계 관련인사 17인으로 구성된 일본의 투자환경조사단이 지난 6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했다. 동 투자환경조사단은 방한 중인 지난 6월 9일(화)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하여 한국의 재벌그룹의 재편성 방향과 경쟁여건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이강우(李康雨)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교환을 가졌다.

동 투자조사단은 한국의 기업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는데, 특히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공정위의 세부적인 기준과 같은 지주회사의 설립허용에 대한 문제와 공정위의 상호채무보증 제한에 따른 계열기업 회사들의 파산 및 도산 발생위험의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기업의 파산·도산시 그 후유증으로 나타날 실업자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처방안과 함께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늦어질 경우 정부가 기업에 대한 매각이나 합병 등을 행정 지도에 의해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길 것인지를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제도의 추진이 30대 기업에 한정되는지의 여부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제도가 30대 기업에 한정될 경우 30대 기업이 기업분할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30위 밖으로 빠져나갈 경우 등의 문제점 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그리고 이미 진출한 외국기업의 최대관심사인 노동문제에 대해 정리해고제가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으며, 정리해고제에 의한 인원감축

에 따른 충격을 해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이강우 부위원장은 지주회사의 문제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설립허용에 따른 장·단점이 각각 존재하나 현재 장점의 방향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의 최소화를 위해 그 허용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 구조조정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기 위해 현재 법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호채무보증의 제한은 대기업집단의 경우 이미 44% 수준으로 낮아져 있어 동 제도의 실시에 따른 기업의 파산이나 도산의 염려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하여는 정부는 원칙적인 기준 정도만 제시하고 실제적인 문제는 해당 기업과 주거래은행간에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제도는 30대 기업집단에 한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인위적으로 회피하려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집단의 경우 지급이자에 대한 Cost의 불안정 등으로 손비처리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어 부채비율을 낮추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25일 외국인의 주식소유에 대한 1인당·종목당 한도를 완전히 폐지한 데 이어 적대적 M&A도 전면 허용함으로써 외국인이 자유롭게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 5월 8일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해왔던 업종도 국방이나 문화보호 등을 위한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개방하였고, 오는 8월 1일부터는 원유정제처리업도 완전히 개방할 예정으로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는 등 우리 정부가 외